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12. 20.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12월 20일(수) 13:30~19:40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206호 및 제218호, 보고 제53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중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보고안건 제53호 『OOOO OO OOO 제고방안(안)』를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 의결안건 제218호 『전자등록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분산원장 방식이 시장거래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신 것인지?

- (보고자) 맞음. 기존 전자증권 형태도 사실은 분산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임. 분산원장 방식으로 해도 법까지 다 된다고 하면 꼭 분산원장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전자증권도 효율적인 경우(case)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놓는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19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20호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등 5개 농축협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단위농협 펀드판매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여러 가지 지도나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4호 『반대수익증권 매수 연기 승인제도 운영방안 보고』를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펀드신속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여기 ‘반대매수 연기’라는 것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매계약은 체결되고 매매대금만 나중에 이연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반대수익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청구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한 경우 승인을 받아서 연기할 수 있다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반대매수청구권은 발생을 한 것이고 자금이 없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 연기하고자 하는 내용임.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21호 『(주)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1만개가 넘는 제품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중국에 보내 LCD패널하고 카메라센서를 분해해서 가져오는 과정이 문제가 됐던 건임. 이것은 나가면 수출이고 들어오면 수입이기 때문에 분식이 아니냐는 생각은 해 보지도 못했음. 다만, 9월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매팀 직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다는데 그것이 전자철판한 것처럼 내부분서를 수정 해서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이후 제가 직접 금감원에 소명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걸리지 않았나 싶고 추후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그 직원은 왜 사실과 다른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는지? 사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를 했다면 자료를 조작할 이유가 없지 않았겠는지?
- ▶ (진술인)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음.

○ (위원) 감사인에게 제출된 자료 중에는 오류나 실수 또는 조작과 허위가 없었는지?

▶ (진술인) 그러함. 금감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 저희 구매팀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부 조작된 서류가 있었던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 회사는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는지?

- (보고자) 회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상장할 때 상장요건도 맞추고 시총가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음. 최초 제품이 나갈 때 그 회사 매출원가 부분과의 차이 부분이 95억 원 팔면 한 30억 원 정도 이익이 났음. 또한 판매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평가손실 있어서 결과적으로 52억 원의 순익효과가 있는 것임.

○ (위원) 감사인한테는 자료를 허위없이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 (보고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허위 매출하고 허위로 원재료를 구입한 것과 관련된 서류가 허위자료라고 한 것인데, 대표이사는 이것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허위자료를 저희 금감원 감리실에 제출하면 저희가 발견할 것 같으니까 허위자료를 다시 한번 더 조작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던 것임.

○ (위원) 제품 판매와 LCD 모듈 및 카메라 모듈 원재료 구입

한 거래처가 동일 주소지인데 감사인 입장에서도 이것이 가공거래인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닌지?

- (보고자) 그래서 저희가 감사인도 '과실'로 지적을 하는 것임.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 주소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check)을 못했음.
- (위원) 지정감사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인지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
- (위원장) 기본적인 분식회계와 연관된 원초적인 자료 가공 내지 조작인지, 그다음에 외부감사 방해와 허위자료 제출이 감리 방해가 되려면 어디부터인지 하는 부분과 감사인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위원) 같은 생각임.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222호 『(주)OOOOOOO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5호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보고』를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장) IFRS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아직 못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음.

- (보고자) 가상자산이라는 특정 산업(Industry)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 IFRS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특정된 기준이 없다고 적용하지 않는 오퍼레이션(operation)들이 많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에서 수익을 인식할 때나, 공정가치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주소록을 달아놨다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15시 19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의결안건 제223호 『앱솔루트자산운용(주) 등 4개 대상자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법무법인 ○○의 □□□ 변호사임. 미래에셋캐피탈(주)을 대리해서 조치원인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준비된 PPT자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음. 우선, 조치원인사실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당사는 2019년 1월22일부터 2022년 4월7일 기간 중 총 104일, 3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보고하지 않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당사는 2019년 4월11일부터 2019년 7월4일 기간 중 총 35일, 1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기한 내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한 사실이 있음.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과태료 3억 7,650만 원 부과 건의가 예정되어 있음. 이번에 당사가 의견을 개진하려는 범위는 2019년 5월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지연보고 22건 및 지연공시 5건에 한하여 위반행위 동기를 ‘중’으로 평가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음. 먼저, 본 건은 1건의 보고의무 위반, 1건의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우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겠음. 제재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임.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과태료 부

과기준은 원칙과 예외로 하고 있음. 그리고 이 과태료 부과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다시 표명되어 있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만족했을 때 2개 이상의 위반행위라도 규범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음. 이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첫 번째는 동일한 위반행위의 반복과 관련된 요건임. 당사는 아난티 1개 종목에 대해서 지연보고와 지연공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충족함. 다음으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요건임. 당사는 약 3개월에 걸쳐서 지속 후 일괄보고 및 공시로 이 행위를 종료하였고 보고 및 공시지연 모두 당사의 전산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임. 세 번째로 행위의사가 단일함. 업무미숙이라는 단일한 원인으로 단일한 종목에 대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요건도 충족함. 마지막으로 침해된 법 규정이 동일함. 지연보고 22건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제1항 위반, 지연공시 5건은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3 위반으로서 침해된 법 규정도 동일하고 따라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하나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음. 형법상 사기라든지, 식품위생법 위반 판례에서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어진 장기간의 행위도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판단하였으므로 본 건도 하나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함. 과거 자본시장법상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포괄하여 각각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가능함. 예시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중 115개 종목도 있고 192개 종목에 대해서 공시의

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음. 이처럼 다수의 종목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위반행위를 상당부분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으므로 본 건 위반행위도 일련의 지연보고와 지연공시를 각각 하나의 위반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다음으로 당사는 단순 업무실수에 의해서 이런 공시의무와 보고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동기 ‘하’를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음. 위반 결과가 ‘경미’하고 동기가 ‘하’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금액의 20% 정도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중과실이란, 일반적으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알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위반동기와 관련하여 당사의 리스크 헤지목적 및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한 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임.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등이 고려되어야 함이 원칙임. 당사가 처음 이 공매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난티 종목의 오버행 이슈(overhang issue)로 인한 리스크를 헤지하고자 2019년 1월경 처음 공매도를 개시하였음. 어떤 투기 목적이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공매도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음. 당시 아난티 종주가 오르다 보니까 이를 위험회피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공매도를 개시하는 것이 오버행 이슈(overhang issue)에 노출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공매도를 시작했던 것임. 이처럼 당사의 공매도 개시는 시장교란이나 불공정거래와 같은 동기가 전혀 없었고 리스크 헤지(risk hedge) 차원의 공매도였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림. 당시에 저희가 공매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물론 급하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라는 당사에 회수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환사채 포지션 일부 처분검토보고서(2019년 1월 15일)를 실제로 거쳤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매도를 개시했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공매도를 진행해 왔음. 그래서 본부 내 협의를 통해서 공매도 종목을 선정했고 모든 공매도 진행시 일별 분산 주문과 장중 분할매도 주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 가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공매도를 진행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본 건 위반행위의 ‘중과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우선, 당사는 2019년 1월 공매도 업무를 시작하여 경험이 전혀 없었고 저희는 여신금융업자이기 때문에 같이 PBS를 제공하는 ▲▲▲▲▲▲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행정적 절차를 ▲▲▲▲▲▲에서 고지 또는 조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은 보고 및 공시의무에 대해 저희 쪽에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보고와 공시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또한,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신금융업자이고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런 공매도규제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를 만연히 간과할 수 있는, 즉,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의무는 당사가 금융회사로서 부과하는 의무는 아니고 투자자로서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부담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공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저희가 보고와 공시의무를 인지한 즉시 이런 의무를 다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만연히 방치하거나 게을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미숙으로 봐야 될 것임. 본 건 위반행위는 당사의 공매도 업무 최초 개시 시점에 대부분의 공매도 업무를 ▲▲▲▲▲▲에 의지하는 상태에서 단순 업무미숙으로 발생하였고 그리고 2019년 1월22일부터 5월8일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오로지 아난티 한 종목에 대한 위반만 이루어진 사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위반행위가 ‘중과실’로 판단됨에 따라 당사는 타사의 유사 사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의 과태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앞서 의견드린 바와 같이 본 건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각각 1건의 보고의무 위반과 1건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실’로 평가할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치안과 같이 포괄하지 않고 각 위반행위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조차 그 행위 자체를 모두 ‘중과실’로 평가한다면 이는 매우 과도한 조치이고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생각함.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2019년도에 저희는 여신금융업자로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과 전담중개업무계약(PBS)를 체결해서 ▲▲▲▲▲▲으로부터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 주선, 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당연히 수수료를 제공하고 한 것

이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캐피탈로서는 이런 식의 계약들이 일반적이지 않음에 반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공매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을 받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과 PBS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당사로서는 최소한의 실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모든 공매도 진행은 ▲▲▲▲▲▲▲▲을 통한 주문형식으로 이뤄졌고 기타 부수업무도 ▲▲▲▲▲▲▲▲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따라서 저희로서는 ▲▲▲▲▲▲▲▲에서 당사 의무사항을 대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안내는 해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임. 그리고 2019년도 5월 20일경 당사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와 공시의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5월20일경에 최초로 이 외국인 공매도 관련 기사를 접했고, 접한 이후에 ▲▲▲▲▲▲▲▲ 담당자에게 공시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문의하고 비로소 당사가 보고와 공시의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됨. 저희가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으나 법규준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와 법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등을 감안하여 위반동기를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음. 저희가 ▲▲▲▲▲▲▲▲과 그 당시에 체결했던 전담중개업무계약서 중의 일부가 나와 있음. 제10호를 보시면 '제1항 및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한 업무'도 저희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음. 그 다음 장에는 기사내용들이 나와 있고, 당시 ▲▲▲▲▲▲▲▲ 담당자와 저희 ☆☆☆ 수석이 나눈 대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당시의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 범위에 있어서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
▲▲▲▲으로부터 이런 보고와 공시의무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제반 업무 및 행정적 절차들을 의존하고 있
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임. 그리고 내부감사 프
로세스 개선 이후에 더 이상의 지연보고와 지연공시는 현
재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당사는 2차례 지연보고와
지연공시의무에 대한 내부감사를 마치고 2020년 4월에 공
매도 매뉴얼을 정립하고 담당자를 선정하는 등 보고와 공
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의 보고와
공시 지연 사례나 미보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 마지
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음. 본 건 위반행위를 구성하
는 지연보고행위 22건과 지연공시행위 5건을 각각 포괄하
여 하나의 지연보고행위와 하나의 지연공시행위로 산정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람. 당사는 고의로 본 건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고, 즉시 일괄보고와 공시를 하였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한 주의의무의 해태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실'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동기 '하'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람. 그 외에
본 건 위반행위에 시장교란이나 불공정거래와 같은 불순
한 동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당사가 시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최소화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프로세스
개선 후 지연보고 및 지연공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사
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과태료를 산정하여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현재의 조치안과 같이 포괄하지 않고
각 위반행위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조차 각 행위를
전부 '중과실'로 평가한다면 당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주실 것을 부

탁드리겠음.

- (위원) PPT 23페이지 대화 내용을 보면 미래에셋캐피탈(주) 담당자가 “공시 의무가 저희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PBS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라고 ▲▲▲▲▲▲▲ 담당자에게 물어봤을 때 “공시는 직접 하셔야 하구요” 라고 되어 있음. 공시는 미래에셋캐피탈(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지?

▶ (진술인) 미래에셋캐피탈(주) ☆☆☆임. 당시에 ㅎㅎㅎ 대리 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실무자였음. 저희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공시 의무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파악하고 의무에 대해서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 ▲▲▲▲▲▲▲ 담당자 ㅎㅎㅎ 대리에게 문의했던 사항임. 명확하게 저희 쪽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그때서야 기관용 매뉴얼이라는 것을 인도 받아서 해당 내용을 확인했던 상황이었음.

- (위원) 공매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셨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떠한지?

▶ (진술인) 말씀하신 것이 맞음. 저희가 최대한 내부적으로는 회수심의위원회라든지 유관부서의 실무자 회의 등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검토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이라고 하는 곳과 PBS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공매도 개시 전에 컴플라이언스의 사전검토가 좀 있었는지?

▶ (진술인) 모든 공매도 건은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 품의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당시에 컴플라이언스도 결재 라인에 들어가 있어서 결재 차원에서 한 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저희가 인원도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했던 면이 있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실수가 있었음.

▷ 진술인이 퇴장함.

(16시 07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 (위원장) 제223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음.
다른 부분은 금감원 원안대로 하되, 애플루트자산운용(주)의 경우 위반동기 및 위반결과의 경미함, 재정상황, 순보유잔고 변동의 미미함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감경하여 2,940만 원으로 부과하고, 미래에셋캐피탈(주)의 경우 본 건 보고의무 미숙지에 관련하여 PBS사와의 책임소재 다툼이 있는 점, 과태료 총액이 과다한 점, 단일 종목(아난티)에 대한 순보유잔고 변동의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30% 감경하여 2억 6,35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06호 『OOOOOOO(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고 동 안건의 내용 설명은 생략함.

- (위원장) 제206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먼저, 혐의자 ●●●●●●● 및 ☆☆☆☆☆이 본 건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킨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안대로 ‘고발’ 조치하겠으며,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거래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고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6,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또한, 본 건 블록딜 거래 매수자 ▼▼▼▼▼, ○○○○○, ☆☆☆☆☆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인 본 건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스왑 주문을 제출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본 건 블록딜 정보가 유사 조치 선례에 비하여 매도인 정보, 블록딜 규모, 할인율

크기 등에 비추어 다소 경한 측면이 있고, 조치대상자들이 통상적으로 블록딜 거래 후 포지션 헷지를 위하여 매도스왑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일부 감경해 ▼▼▼▼▼에 대해서는 2억 8,120만 원, ○○○○○○에 대해서는 14억 8,450만 원, ☆☆☆☆☆에 대해서는 2억 5,3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한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과징금 산정방식에 있어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에서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기준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내년 1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에서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 소관과는 이를 고려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224호 『(주)OOOOO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225호 『OOOOOO(주) 주식에 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 담보비율 담보력을 보장하고 주식차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장사를 인수 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지난번 위원회에 와서 소명을 하였듯이 저는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가 당시 자금이 어려워서 전환사채를 넣어주겠다는 투자자들의 말을 믿고 제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그 당시에는 판단해서 그것을 납입하려고 발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회사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납입을 못했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예상하는 대로 저는 이번 거래를 통해서 1주의 주식도 산 적도 없고 3년 정도 경영하고 매각을 했는데 오히려 빚만 10억 원 정도 지고 그것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임.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저는 금감원으로부터 (주)○○○○○ 관련 개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부정거래 한 행위로 혐의가 있다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5월15일 기발행 전환사채 490만 주, 당해 연도 6월14일에 전환사채 267만 주, 당해 연도 6월19일 기발행 전환사채 66만 9,000주에 대해서 주식이 전환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콜옵션도 없었고 (주)○○○○○의 관련 주식거래 단 1주도 매매한 적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차액이나 담보가치 제고를 위해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할 이유도 없었음. 다만, 제가 경영지배인 시절에 인수단의 요청을 받아서 전환사채 요청 발행 공문을 보낸 적은 있음. 공문을 보냈고 그 행위는 (주)○○○○○의 매도자인 (주)■ ■ ■ ■ ■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임. 그리고 기발행된 CB에 관련된 주식전환은 전부 다 기존 매도자 측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도 제가 아닌 (주)○○○○○ 모회사인 (주)■ ■ ■ ■ ■의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행 요청 한 것에 대한 공문을 허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리고 당시 (주)○○○○○는 4년 연속 영업손실 및 5년차 퇴출, 그때 당시는 제도적으로 5년 차에 퇴출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자금을 유치하지 않았으면 회사는 급격하게 더 힘든 상황이 됐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요청 드린 것은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라 실질 (주)○○○○○의 인적 구조조정을 포함한 물적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제 자금이 필요했고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행요청 공문을 매도자에게 보내게 된 것임. 또한, 당시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인수단에서 ◆ ◆ ◆ 씨라는 분도 저는 그때 당시 처음 보게 됐고, 다만 인수단의 ○ ○ ○ 이라는 분은 ■ ■ ■ 2세로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했을 때는 본인이 투자할 테니 믿고 발행요청 공문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게 된 것뿐임. 그리고 경영권 관련 담보도 저희가 아닌 대부업체인 ○ ○ ○ 씨가 이미 경영권을 담보로 해서 이사진 4명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질업무 외에는 어떤 경영상의 행위에 대해

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년간 대표이사를 했고 저 나름대로 훌륭하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생각함. 5년차에 영업이익도 돌려놓아서 관리종목도 탈피했고, 은행 부채도 다 정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급여를 받은 것이 만약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을 하면서 지금도 소송에 시달리고 빚더미에 올라서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부정거래 행위를 한, 그것도 개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음.

- (위원)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실무일을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수업무에 관여하게 되신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전문경영인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우선, 인수법인 (주)■■■■가 제주도에 ■■■■ 3개를 운영하고 있었음. 그런데 (주)○○○○○의 자회사 중에서 ■■■이 있었는데 (주)○○○○○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된 회사임. 농장회사인데 이 농장의 주 생산품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주도 전역과 전라남도 일부에서만 나는 ★★임. 이 ★★를 상품화시키고 중국 관광객을 연계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수합병 업무를 잘 모르니 ●●●씨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부사장의

로 입사해서 들어와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지배인을 하게 된 것임.

- (위원) 아까 진술하실 때 CB발행 결정 공시로 인해서 前최대주주가 가장 득을 봤다고 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은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前최대주주라고 하면 (주)■■■■■■ ■■■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씨 쪽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그 전환사채를 ■■■씨 투자자 쪽에서 주식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결국 주식을 전환시킨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주식 콜옵션도 없고 주식 1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익을 보겠으며, 또 당시 전환사채가 주식전환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행사한 사람들이 실질 수익자들이지, 주식 1주 없고 전환사채 콜옵션 하나 없는 분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다른 부분은 금감원 원안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씨는 잘 모르고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협조한 것 같음. 그래서 수사기관 통보로 하자는 일부 소수의견이 자조심에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 (참여자) 이런 분들이 있음. ○○○도 전력을 보면 ♥♥♥라고 있음.

○ (위원장) 그런데 무혐의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음.

- (참여자) 그러니까 애매했을 것임. 이런 분들 보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음. 그래서 조사할 때 보면 계속 이름이 등장하는 조합 대표로 혐의는 딱히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상 끈들이 어떤지 알면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계속 그 경계선에 있으면서 그들의 옆에서 이익을 취하고 범행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 다음에도 또 나가면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면 또 옆에서 도와줌.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교도소 담벼락을 걷다가 어느 순간 깊이 빠졌을 때는 떨어지는 것임.

○ (위원장) 적극적 가담은 아니어도 사실상 묵인된 방조범이다, 조력자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음.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이분 수사기관 통보해도 어차피 차이는 없는지?

- (참여자) 그러함. 어차피 이 사람도 조사해야 됨. 직접 실행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결국 범의의 문제임.

○ (위원) 수사기관 통보에 동의함.

○ (위원) 최근에 공시의무 위반과 부정거래 행위를 꼼꼼하게 보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음. 단순 공시의무 위반이나 아니면 부정거래 행위나 관련해서, 여기 보면 담보비율을 높이고 고가에 처분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실제 처분을 안 했음. 그러면 담보비율을 높이려고 했을 때 담보비율이 어느 정도 위태위태해서 이것을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것을, 매매관련성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한 공시의무 위반에서 더 나아가서 관련된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부정거래까지 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볼 사안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제224호 안건은 ●●●의 경우 전문경영인으로서 자금을 유치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는 진술 등을 감안하여 조치수준을 '수사기관 통보'로 낮춰서 수정의결하겠음. 제224호 안건 나머지 부분과 제225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제224호 수정의결 및 제225호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224호 수정의결, 제225호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26호 『OOOOOOOOO(주)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OOOOOOOOO(주) 의견진술 요지를 말씀드리겠음. OOOOOOOOO(주)(이하 OOOOOOOOO이라고 함)의 대표 □□□임. 당사자 OOOOOOOOO과 당사자 □□□에 대한 조치예정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같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 올리겠음. 먼저, ‘당사자 OOOOOOOOO의 대표이사 □□□과 당사자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에 대한 인수·합병이 진행 중으로 우회상장이 예정되었다” 등의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가장거래 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해명하는 말씀 올리겠음. 본 □□□은 ▲▲▲▲(주)(이하 ▲▲▲▲이라고 함)을 실제로 인수·합병하여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음. ▲▲▲▲에 대하여는 2012년 11월경 ○○○○○○○○가 M&A를 추진하기도 하였고, ▲▲▲▲은 2021년 11월4일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였음. 실제로 ▲▲▲▲은 2021년 11월26일부터 2022년 6월3일까지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매각설과 관련하여

‘부인’하지 않고 6번의 ‘미확정’ 공시를 했음. 2021년 11월 4일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무렵, 본인 □□□은 ‘▲▲▲▲을 인수하여 적자경영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서, ▲▲▲▲에 최대주주 지분 인수제안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인수의향서를 ▲▲▲▲에 직접 제출하였음. 그리고 본인 □□□은 ▲▲▲▲의 전 대표이사인 ■■■을 만나서 ▲▲▲▲ 인수를 위한 동향을 파악하고, ▲▲▲▲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고, ▲▲▲▲ 인수자금 확보를 위하여 자금주 ☆☆☆으로부터 5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의 최대주주에게 인수제안서를 여러 차례 발송하여 인수의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는 등으로 실제로 ▲▲▲▲을 인수·합병하려고 하였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은 실제로 ▲▲▲▲을 인수·합병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람. 또한, ‘당사자들이 가장거래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 당시 계좌 등에 대하여는 압류가 들어왔고, ○○○○○○○○의 임직원 및 주주들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의 운영이 계속되어야 하였기에, ○○○○○○○○은 부득이 위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 등의 주식과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것일 뿐 ○○○○○○○○은 가장거래 등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위 계좌 등의 주식과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사실은 ▲▲▲▲ 인수·합병 노력과도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은 비상장회사로서 주식거래

사실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주식거래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투자자들의 투자에 전혀 영향이 없고, 위와 같은 사정
으로 ○○○○○○○○의 주식 등 이체 사실은 시세조종
등과도 전혀 무관하여, 결국 ○○○○○○○○은 가장거
래 등 위계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위와 같은 사
정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랍. 당사자들이 ‘증권신고서(매출)
제출의무 위반’을 하였거나 ‘소액공모공시서류(모집) 제출
의무 위반’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매출) 제출의무 위반’
을 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
하고 있음. 다만, ○○○○○○○○은 비상장회사로서 회
사에 증권 담당 전문 직원도 없었고, 대표 □□□은 법에
무지하여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한
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실수를 한 것인 바, 이 점
에 대하여는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당
시 ○○○○○○○○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진행하
면서도 전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존하였음.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적어도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 주었다면 소액공
모공시 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소액공모공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인데, 본인 □□□은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소액공모공시 서류 제출 등에 대해
서 그 누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
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음. 본인 □□□은 이번 조치사전
통지서를 받고서야 몰랐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어 정말로 너무나 놀랐으나,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는 주식거래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법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맹세하는 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임. 다만, ○○○○○○○○은 비상장회사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소액공모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시세조종 등의 생각은 전혀 없었음. ▽▽▽와 ◁◁◁이 신문광고를 내어 주식을 판매한 부분도 ▽▽▽와 ◁◁◁이 먼저 신문광고를 내어 주식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와 ◁◁◁이 법적인 부분까지 모두 문제없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나, 본인 □□□은 법에 무지하여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맹세함. 본인 □□□은 법에 무지하여 법 위반을 하게 된 부분이 있으나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의 주주수가 1,368명이 넘고, ○○○○○○○○은 회사 설립 후 8년차의 회사로서 임원들이 회사를 위하여 모든 정열을 바치고 있는 회사로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은 2022년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금액이 2억 1,000만 원이나 소송을 통하여 이를 변제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현재 ▽▽▽가 은행통장을 압류를 해 놓아서 통장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인 통장의 경우에도 ▽▽▽가 압류를 하여 법인도 통장거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 사기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변제받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니 다소간의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6호 『(주)OO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보고안건 제57호 『(주)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일괄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27호 『(주)OOOO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고발을 하자는 3인 자조심 위원 의견이 있었음.

○ (위원) 부당이득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음. AAA씨는 정보공개 전에 20,890주를 매수하고 10,010주를 매도하여 10,880주를 순매수하였고, 정보공개 이후 매도한 수량이

11,534주로 되어 있음. 부당이득 산정에 이용된 매도 수량이 매수 수량보다 높은 것인지 답변바람. 또한 BBB씨는 정보공개 전 14,957주를 매수하였으며 정보공개 후에는 5,080주만 일부 매도하고 7,500주를 매수함. AAA씨도 정보공개 후 매수거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부당이득 산정방식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미공개중요정보 지득 이전의 매수분은 제외하고, 지득 이후부터 정보공개 전까지 순매수한 수량에 대해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음. 그리고 정보공개 이후 매도수량 중 순매수한 수량과 상응하는 일치수량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였음. 따라서 AAA씨는 매도수량 11,534주 중 순매수 수량과 일치하는 10,880주를 대상으로 최종부당이득으로 산정하였음. 또한 AAA와 BBB 모두 동일하게 최초형성 최고종가 이전에 매도한 경우는 실현이득,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실현이득으로 분리하여 계산하였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7시 12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 의결안건 제228호 『OOOO 등 9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 5분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괜찮으시면 ♠♠♠♠♠ ♠♠♠♠♠♠♠♠♠♠에서도 ●●● ●●●●●이 대표로 간략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 먼저, ♠♠♠♠♠ ♠♠♠♠♠♠♠♠♠♠을 대리해서 진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사전통지 받은 본 건 공매도 주문이 공매도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함. 다만, 본 건 주문이 형사고발 요건을 충족하는 고의적인 사안인지, 또 그간 전례가 없는 형사고발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그 위법성이 중한지에 대해서 귀 위원회에서 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 그러나 자조심에서도 고의 여부가 논의되어서 저희가 추가의견진술서를 관련 이메일과 함께 제출해 드렸습시다라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게 한국 법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부서간 용어혼란으로 인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회사는 2021년 5월경에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야 비로소 본 건 시스템을 통해 처음으로 공매도 스왑거래를 개시하였고 당시 관련 실무팀이 컴플라이언스부서와 SBL Desk를 통해서 한국 법령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음. 그런데 그 당시 Email을 보면 관련검토를 진행함에 있어 고객과 진행하게 되는 공매도 스왑거래 절차와 저희가 진행한 헤지거래 절차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어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 같음. 특히, 그에 따라서 “확정된(confirmed)”/ “승인

된(approved)” 및 “확정된 로케이트(confirmed locate)”/ “사전차입(pre-borrow)”라는 용어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했던 것으로 보임. 실무팀에서는 “confirmed locate”를 “locate approved”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고 결국 “confirmed”나 “pre-borrow”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본 건 시스템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스왑 로케이트(Swap locate)를 잔고확인절차를 거쳐 확정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둘째로 첫 번째 절차가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로케이트 관련된 일시, 날짜 등을 본 건 시스템에 기록하면 충분하다고 잘못 이해를 하였음. 이처럼 본 건 공매도는 부서간 소통 오류(Miss Communication)에 기인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회사가 공매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 보는 것도 없고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선조치를 취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음.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매도 스왑 주문을 헤지(hedge)하기 위해 주문하였을 뿐이어서 본 건 공매도로 인한 경제적 수익자는 해당 고객일 뿐임. 회사는 공매도 스왑주문을 한 고객으로부터 단지 명목상 수수료만 받을 뿐이고 회사가 고의로 위법을 자행해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요인도 없었음. 그리고 회사는 잠재적인 공매도 위반가능성을 인지한 직후에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각적 시정조치를 취하였음. 이처럼 회사의 공매도는 단지 실수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드림. 다음으로 과연 본 건 공매도 위반이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할 당시에 형벌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위반행위 간 제재수준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세조종이나 다른 자본시장법령 위반이 수반되지 않은 공매도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발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건 공매도는 여러 거래상대방과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risk)를 헤지(hedge)하기 위한 거래이고 본 건 공매도로 인한 경제적 수익자는 해당 고객일 뿐 회사는 직접적인 이익을 보지 않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시세조종과 같은 정도의 시장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지도 않고 또 시세조종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본 건 공매도에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지 의문임. 회사는 공매도를 악용한 어떠한 불공정거래행위에도 관여된 바 없으며 주문제출 과정에서 업틱룰(uptick rule) 등 공매도 규정상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본 건 공매도가 자본시장법상 가장 중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동안 전례가 없는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인지 숙고해 주실 것을 희망함.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고 이어서 ○○○ ○○○○○ 추가진술하도록 하겠음.

▶ (진술인) 저는 ♠♠♠♠♠ ♠♠♠♠♠♠♠♠♠♠ 아시아태평양 지역 Markets and Securities Services 사업부문의 대표인 ○○○ ○○○○○임.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비롯하여 ♠♠♠♠♠ ♠♠♠♠♠♠♠♠♠♠의 기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임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음. 오늘 귀 위원회 심의안 건인 공매도 사건에 대해 출석하여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은 본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한국의 증권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은 한국의 공매도 규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심에 있어 귀 위원회가 고려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함. 먼저, 첫 번째로 본 사안에서 의도적으로 한국의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음. 당사는 한국 감독당국의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귀 위원회 및 한국 감독당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음. 당사는 우려사항이 발견되자마자 관련 규제의 완전한 준수를 위하여 적시에 시정조치를 취하였음. 저희가 취한 시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귀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음. 본 건 공매도 주문들은 2021년 당시 다양한 거래 상대방들과 체결한 Total Return Swap 계약에서 발생하는 시장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들임. 각 주문은 관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스왑 로케이트(Swap locate) 요청을 받았을 때 가용잔고를 확인한 후 제출되었으며 헤지주문을 제출하기 이전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업틱룰(uptick rule) 등 한국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거래 전 통제점검을 거쳤음. 당사는 본 건 공매도 주문들을 제출함에 있어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었음. 또한, 거래데이터에 따르면

본 건 공매도 주문들은 어느 시점에서도 시장이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아울러 헤지주문의 특성에 따라 당사는 본 건 공매도 주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의도가 없었음. 당사는 본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 공매도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기 전에 확정된 사전 차입주식을 포함한 충분한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거래통제를 개선하였고 한국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함에 있어 사전차입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관련 직원들에게 한국 공매도제한 법령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음. 저희가 취한 시정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재출한 의견진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본 건 시정조치를 취한 이후 당사는 보다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부 컨설턴트를 선임하여 한국 공매도 규정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당사에 적용되는 규제내용 및 관련 통제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해당 검토 결과 한국 공매도 절차와 관련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저희가 본 위원회에 출석함으로써 당사의 한국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당사 측에서 본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되기를 바람.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 공매도 규정 준수와 관련해서 본 건 외에는 문제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음. 당사는 증권규제기관들과 굳건한 관계를 항시 유지하고 있음. 본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한편 당사는 시장의 규칙을 문언과 취지의 모든 측면에서 준수해야 한다고 믿으며 또한 시장질서 유

지 및 고객에 대한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신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에 따라 당사의 지속적인 한국 내 규정 준수를 위한 귀 위원회의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있으면 무엇이든 수용할 것임. ♠♠♠♠♠ ♠♠♠♠♠♠♠♠♠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주신 귀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저희의 거래가 한국의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음. 당사는 철저한 준법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및 투자자와 시장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음. 귀 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심에 있어 저희가 본 회의에 참석해 제시해 드린 감경요소들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 2021년 8월23일부터 2021년 12월8일까지 문제된 위반행위가 있었는데 2021년 12월8일 이후로 그 위반행위가 계속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한국 공매도 규정에 위반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한국거래소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이런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는 공매도는 맞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신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회사가 주장하는 바에 의해도 최소한 ‘중대한 과실’ 또는 ‘과실’이 있는 공매도 위반인데 회사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 (진술인) 저희가 관련사건과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하이 레벨(high level)로 검토를 진행했는데 이 검토를 진행함에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부분들은 혼란으로 빚어진 실수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제재(sanction)를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 이들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지금 경영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느끼는 이 위규행위의 크기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제 취지는 중요한 위규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술하시고,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나왔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 과정을 보면 과연 그러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것임.

- (위원)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가 소명하는 내용과 회사가 내부적으로 취한 그 조치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임.

- ▶ (진술인) 우선, 본 건과 같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 (Committee)를 열어서 해당 위원회(committee)는 HR member도 포함되어 있고 Conduct Committee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 (Committee)이기는 한데 그 위원회(Committee)의 결단에 따라 제재(sanction)를 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검토(review)를 진행하고 할 당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검토를 진행할 당시에 관련 당사자들이 저희 회사를 떠나서 이것이 정확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 당사자들이 해당 문제가 발견되고 위원회(committee)가 열려서 판단이 진행될 당시에 저희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조치(action)가 내려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됨. 다만, 이 문제가 발견된 이후 저희는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취하였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프로세스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여러 시정조치는 취하였음.
- (위원) 과거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했을 경우와 현재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했을 경우 업무의 편의성이나 거래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함.
- ▶ (진술인)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진술서 마지막 부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부통제검토절차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도 제재를 받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매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얼마만큼의 거래 건수가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하는 자료는 없음. 다만, 저희 생각에는

그 체크(check)하는 조치들 자체에서 이 부분에서의 효익이 크게 차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워낙 그 수수료 자체가 명목상(nominal)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하나 더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이 취지는 저희가 의견진술서 맨 마지막에 기재한 바 있음.

- (위원) 동어 반복적으로 대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출하신 진술서에 보면 2021년 3~4월에 한국의 공매도 법규 규정을 매우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케이트로 하는 공매도 방식을 내부적으로 계속 사용한 것이 이해가 안 됨. 아까는 고객과의 거래와 한국에서의 공매도 간에 혼선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떤 혼선인지를 설명해 주시든지,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음. 2021년 첫 번째 위반이 8월인데 그 전에 한국 공매도제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으로 진술서에는 보임. 2023년 12월11일자 제3차 자조심 때 제출된 의견진술서로 되어 있음. 의견진술서(4) 국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6페이지 부서별로 주고받은 Email에 보면 'Short Sale Rules'이라고 해서 하나는 'Recognition of ownership of borrowed security'이라고 해서 locating하거나 easy-to-borrow하거나 security에 hold를 걸어두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정확히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21년 4월30일자에 주고받았다고 되어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위반한 2021년 8월보다 4개월 전이란 말임.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것과 다른 공매도 방식이 적어도 3~4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이 납득

이 안 감. 작은 회사도 아닌 큰 금융기관에서, 똑같은 설명을 반복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잘못 읽은 것인지?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음.

- ▶ (진술인)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에 공매도를 하려고 한 시점이,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4월말에 공매도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서 간의 논의가 있었음. 그런데 여기 보면 Business Management 부서도 있고 Compliance 부서도 있고 대차거래가 가능한 SBL Desk도 있고 그간에 Email들이 오고 갔는데 아무래도 Business Management 부서는 2001년 4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최근에 공매도 규정이 어떻게 바뀐 것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SBL이나 Compliance에 물어봤을 때 말씀대로 Compliance 부서에서는 Email에 대한 답을 하기는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케이트 그 이상의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덧붙인 부분이 반드시 공매도 주문이 나가기 전에 해야 되고 이것은 증빙(evidence)으로 감독 당국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진술을 하였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한 쪽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로케이트 그 이상을 하려면 증빙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Timestamp나 Date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찍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이해했는지, 말씀하신 6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Compliance 부서가 중간에 그렇게 답변한 부분을 보면 고맙다고 하면서 confirmed/approved locate가 short-sell order 전에 있어

야 되고 그것이 evidence로 date/timestamp가 찍혀야 된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결국 증빙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앞서 있어야 된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임. 다만, 여기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은 confirmed/approved locate라는 용어를 이쪽에서 사용을 했는데 confirmed라는 의미가 한쪽에서는 confirm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Confirmed된 borrow라고 이해했을 것 같고 이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locate 자체가 confirm된 것으로 이해한, 서로 용어상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음.

○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당시에 적어도 이것을 받는 쪽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지?

▶ (진술인) 그러함. 질의를 했는데, 사실 한국의 공매도 규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 듣는 과정에서 특히 “confirm”이라는 용어도, 같은 단어인데 locate 단에서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 lender 단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보니까 그 “confirm”이라는 용어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음.

○ (위원) 알겠음. 이것을 단순히 언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하기에는 규모도 너무 크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도 아닌데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음.

▶ (진술인)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만약에, 이것을 시스템을 잘못하는 경우 공매도위반이 바

로바로 나와서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인지를 했다면 저희가 몇 개월씩 걸리지 않고 바로 개선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음. 그런데 저희가 의견진술 뒷부분에 갭에 관한 부분을 자조심 때 질문 주셔서 많이 쓰기는 했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와서는 잘못된 것을 알지만 당시에는 이 갭, 저희가 사실 공매도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가용성 파일(availability file)을 두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Blackrock이나 Citibank 등 유수의 20여개의 대주도 두고 있고 그것도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갭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글로벌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매도 위반이 적시·적발이 안 되었던 것 같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인지를 못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실 “confirmed”라는 이 절차 하나, 수수료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저희가 한국의 규정을 위반할 정도로 이렇게 무리하게 이유가 없었고 심지어 공매도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수익은 저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는 것이어서 저희에게 그럴 동기나 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의결안건 제229호 『OOO 등 101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오늘 진술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법률대리인으로서 제가 의견진술을 하고 회사에서 또 의견진술을 간략히 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실 때 저희가 홍콩에서 원격으로 참석하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마이크를 끄고 상의 후에 통역을 하고 답변드릴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요로 본 건에 대한 소명인의 기본적인 입장 그리고 본 건 공매도와 관련된 복수 독립거래단위의 구조를 설명드린 후에 형사고발에 대한 입장, 과징금 감경사유, 결어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먼저, 개요임. 금융감독원은 □□□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서 가용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64만여 주, 397억 원에 대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14억 원 및 형사고발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조치 통보를 한 바 있음. 이에 대한 소명인의 기본 입장을 말씀 드리겠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 위반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음. 그렇지만 본 건은 고의가 전혀 없는 사안으로써 □□□□는 발견 즉시 신속히 자진신고, 그리고 개선조치를 하기 위한 확실한 행위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본 건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를 실행할 동기나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었고, 복수 독립거래단위 체계 도입 초기에 내부 대차거래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법 위반이 발생한 것이며, 해당 문제를 즉시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 건수가 적고 규칙성. 즉, 패턴화 되지 않았으며 통제장치가 무차입공매도의 탐지보다는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임. 그리고 □□□□는 법위반 사실 발견 후에 즉시 자진신고를 했고 매우 세밀하고 광범위한 내부점검을 수행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사안이 전혀 아님을 알 수 있음. 아울러 본 건에 있어서는 과징금 감경사유도 존재함. 먼저, 본 건 무차입공매도 내역 중에서는 일반매도주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일반매도주문은 제외되어야 됨. 그리고 중복 계산된 정정주문도 있는데 그 중복계산도 해소되어야 함. 나아가서 원주문을 구성하는 분할주문 중에서 미체결주문이라든지 원주문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모두 제외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원주문 내로 한정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함. 나아가서 본 건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의가 없고 불공정거래, 그리고 결제불이행이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영향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발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했다는 점을 종합할 때 이러한 점이 과징금 산정에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헤량해 주시기 바람. 이하에서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수 AU 공매도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음.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조를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여 여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먼저, 그림 중앙 하단에 보면 Long AU, Main AU, Short AU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는 2021년 10월에 이와 같은 복수 독립거래단위 Aggregation Unit, 이하에서는 AU 라고 하겠음. 이 복수 AU 체계를 도입하였음. 그중에 Main AU를 회사 고유계정과 관련된 익스포저 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단위이고, Long AU는 고객과의 롱스왑(long swap) 거래 시에 발생하는 시장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한 물량으로 일반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단위임. Short AU는 고객과의 숏스왑(short swap) 거래 시에 발생하는 시장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서 숏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하면서 공매도 주문을 하게 됨. 따라서 이 구조 하에서 Short AU만이 차입공매도 주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차입공매도는 헤지(hedge). 즉, 고객과의 스왑 계약에 따른 헤지 포지션(hedge position) 유지를 위해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주가변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원래 이 Long AU, Main AU, Short AU로 나누는데 있어서 AU 단위에서는 SLAB Desk가 차입을 전담했는데, 그때 단일거래 단위였을 때는 SLAB Desk가 외부차입만 전담을 했었음. 그렇지만 이 복수 AU 체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AU 상호 간에 차입대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차입이 이루어지게 됨. 이에 대해서 SLAB Desk는 기존의 외부 차입뿐 아니라 내부 AU 상호 간의 차입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서 중요한 것은 AU 상호 간에는 이해충돌이나 선행매매 방지 등을 위해서 엄격히 정보공유가 서로 금지되어 있음. 따라서 이 SLAB Desk에서 이러한 차입 및 잔고를 관리하게 되고 각 AU의 트레이더들은 오직 SLAB Desk에서 제공하는 잔고기록에만 의존해서 주문을 하게 됨. 그런데 이 사건에서 SLAB Desk는 복수 AU 체계 도입 초기이다 보니 일부 수작업이 병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내부 차입내역을 기록에 일관되거나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했음. 이에 따라서 그 AU의 트레이더들은 당연히 잔고가 남아 있다고 판단해서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부 소량에 대해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게 된 것임. 당시의 내부통제 체계 상으로는 해당 건들이 무차입공매도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실제로도 확인되지가 않았음. 이와 같이 매우 판단이 곤란한 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음. 이상과 같이 이 사건의 구조를 설명드렸고 이에 기초해서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먼저, 형사고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음. 주지하시듯이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임. 따라서 무차입공매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특히, 무차입공매도는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도입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과는 달리 이 무차입공매도는 적어도 불공정거래와 같은 정도의 명확한 고의와 비난 가능성이 요구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할 것임. 그렇지만 본 건은 고의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 좀 전에 말씀드린 본

건의 복수 독립거래단위, AU 구조 그리고 법 위반 발생 원인, 사후 조치 등 모든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이 고의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결과 발생만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고발을 위해서는 고의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먼저 무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행위 시점에서 제출에 있어서 고의나 인식이 없었음.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탐지하지 못한 것, 탐지를 실패한 것에도 고의는 전혀 없었음.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 측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실행할 동기나 경제적 유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매도는 주가변동과는 전혀 무관함.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매도 자체가 고객의 스왑거래 시 발생하는 시장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즉, 중립적 포지션 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변동과는 무관함. 따라서 본질적으로 시장변동성에 중립적이고 주가하락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공매도와는 확연히 구분됨. 해당 주문은 이와 같이 스왑거래에 따라서 기계적·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제적 이익은 스왑에 따른 거래수수료밖에 없음. 이 거래수수료가 본 건에 있어서 전체 합쳐서 300만 원 미만이었음. 따라서 □□□□에서는 굳이 불법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무차입공매도를 실행할 아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그리고 주문을 제출한 당사자 자체도 본 건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능력이 없었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U간에는 상호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트레이더들은 SLAB Desk, 대차부서 단위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을 인지할 수 없었고, SLAB Desk가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여 주문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이 주문들을 보면 비교적 적은 수량, 지금 무차입공매도로 확인된 것이 전체 주문체결량의 0.3% 정도가 되고, 이와 같이 매우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결제불이행도 발생한 바가 없었음. 따라서 트레이더들이 문제를 파악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음. 나아가서 트레이더들은 업틱룰(uptick rule) 등 공매도 관련 모든 규정을 준수하였음. 만약에 불법적인 무차입공매도를 할 의도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임. 이와 같이 주문 제출하는 관점에서 행위시에서 □□□□가 무차입공매도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매도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고 저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음. 이런 법위반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 SLAB Desk에서 내부 대차거래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임.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복수의 AU 체계가 2021년 10월에 도입됐는데, 그 도입에 따라서 기존에는 외부 대차만 담당하는 SLAB Desk가 AU간 내부의 대차거래, 잔고관리업무까지 추가로 담당하게 됨. 이런 것이 모두 다 자동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일부 수작업이 병행됐는데 이런 경우 일부 내부 대차 활동 기장이 불완전하거나 일관성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나 트레이더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동기

나 경제적 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규위반은 □□□□ 내부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 그룹의 행동강령과도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문제출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후적으로 탐지의 관점에서도 당시의 통제 환경 하에서는 무차입공매도 탐지가 극히 곤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사후통제체계가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주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결제불이행 방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 무차입공매도 탐지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보니 여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회사는 당시 통제 체계가 적합하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 있었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T+1 관련 보고서들에 음수가 기재되는데, 이 음수는 무차입공매도가 아닌 매우 다양한 원인에 기한 것임. 그래서 그 보고서들 자체만으로는 무차입공매도 탐지가 어렵고, 또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을 의심할 패턴(pattern)이나 규칙성도 존재하지 않았음. 무차입공매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다른 시스템의 상세한 자료를 추가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 □□□□가 자진신고 후에도 매우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서 겨우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런 어려움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서 수탁증권사에서 샘플링(sampling)을 하고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라서 또 샘플링(sampling)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마침 긍정적으로 도출되어서 당시 무차입공매도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오신(誤信)은 더 굳어지게 되었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에서 2022년 5월에

자동화된 장중 주문단위 탐지장치를 도입했는데, 그 도입 이후에 사후적으로 평가해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오신(誤信)의 근거가 되는 이 체계들이 효과적이지 않았다, 무차입공매도를 탐지하는데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대폭 개선조치를 취하게 됨.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통제체계 자체가 미비한 것, 종합적 통제장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이 □□□□가 의도적으로 무차입공매도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방치했다거나 불법적으로 그것을 용인했다고 볼 사실관계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앞에서 말씀드린 T+1 관련 보고서상 음수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음. 이 부분은 마치 T+1 관련 보고서상 음수가 있기 때문에 □□□□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고, 금감원에서도 이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음. T+1 관련 보고서상 음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음. 따라서 무차입공매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예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아랫단에서 거래예시를 보면 되는데, 장중에 AU에서 트레이더가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함. 이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을 했고, 이 당시는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난 것이 아님. 그런데 장마감 후에 기존에 잔고를 넘는 어떤 외부차입 상황이 있게 되면 그만큼 주식이 빠져나가게 됨. 그러면 T+1 보고서에서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잔고부족을 표시하는 음수를 기재하게 됨. 따라서 그 음수만큼 결제부족수량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음수가 기재되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임. 주문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차입공매도 주문이었음. 다만, 그 이후 장마감 후에 외부차입상환이라는 별도의 이벤트에 따라서 음수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이런 음수에 따라서 발생하는 결제 부족수량을 회사에서 커버(cover)함으로써 결제불이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기재된 것임. 따라서 T+1 Cover Report에 음수가 있다고 해서 이를 무차입공매도로 단정짓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음. 따라서 T+1이 관련 보고서에 음수를 무차입공매도 인식의 근거로 삼거나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에서 이런 보고서를 보고 무차입공매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무차입공매도 거래를 진행한 것이 결코 아니다, 용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음. □□□□는 범위반 발견 즉시 내부 점검, 자진신고를 다 하였음. 2022년 5월4일에 범위반을 최초 발견한 즉시 내부조사를 거쳐서 5월16일 자진신고를 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7월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였음. 이에 따라서 금감원 조사가 개시되었고 조사 중에도 □□□□는 계속 스스로 추가분석해서 자발적으로 결과를 제출했는데 그 결과에는 추가 발견된 위반사항도 포함됐음.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방조치를 즉시 이행을 하였음. 이러한 조치를 봤을 때도 □□□□에게 위법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것

임. 정리하면 먼저 이 사건에 있어서 고의가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무차입공매도 주문 제출의 관점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실행할 동기나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는 범위반 결과는 SLAB Desk 도입 초기의 운영미숙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탐지의 관점에서 사후통제장치는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무차입공매도 문제점을 즉시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발견 즉시 자진신고했다는 점,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나아가서 과연 이 사건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가벌성이 있는지도 극히 의문임. 본 건 공매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시장변동성과는 관계 없는, 시장 중립적인 것이고 투기적 공매도가 아님. 전체 시장참여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음. 가격하락에 따른 이익을 위한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본 건은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음. 다음 과징금 감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음. 먼저, 위반내역 중에는 일반매도주문이 포함되어 있음.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 일반매도주문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임이 증명된 바가 없음. 오히려 □□□□ 내부 기록상 외부 차입 및 회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가 아닌 것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야 됨. 특히 말씀드릴 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매도는 Short AU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반매도주문은 Long AU에서 발생하는 것임. Long AU는 롱스왑(long swap)에 따라 롱포지션(long position)을 취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하는 수량을 매도할 뿐이지, 결코 공매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나아가서 본 건 위반 내역에는 분할주문. 즉, □□□□의 원주문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문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 부여한 주문 중에서 체결되지 않은 주문이라든지, 원주문 초과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이것은 당연히 중복계산으로 이루어져서 원주문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반내역에 포함하게 되면 부당이득 환수 취지에 과징금 제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비례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임. 이러한 중복계산을 허용하게 되면 그 위반내역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분할의 취지와도 모순이 됨. 따라서 적어도 제외되거나 원주문 범위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나아가서 여기 위반 내역에는 동일한 주문의 정정주문이 중복계산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복계산도 해소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에서 인정할 수 있는 본 건 무차입공매도, 객관적인 무차입공매도 내역은 총 134건으로 주문금액 134억 원 상당이고, 금융감독원 조치원인사실의 33.7%에 해당함. 이러한 것이 반드시 과징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나아가서 이 사건 범위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 미숙로 인한 것이지,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 그리고 결제불이행이나 추가하락 등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바도 없음. □□□□는 조사 개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자진신고를 했고 무려 18개월간 조사에 적극 협조를 했음. 그리고 전사적 자원을 투입해서 감독당국 조

사에 협조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내부통제도 크게 강화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서 과징금 산정에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콩 측에서 진술하실 것 있으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증선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제 이름은 ∫ ∫ ∫ 이며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태평양지역 □□□□ 그룹의 법무담당 상무이사임. 본 증선위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사의 무차입공매도 건에 대한 설명과 저희의 의견을 드리고자 함. 본 사건을 당사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늘 당사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것은 당사 경영진이 본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먼저, 자조심과 증선위 회의 사이에 단 하루만 주어졌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소명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동시에 증선위 위원들이 본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검토 및 고려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본 건은 지난 2021년 10월 한국주식 매매를 위해 복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도입된 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운영 사건임. 본 건은 저희가 발견 즉시 자진신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였고, 본건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나 고의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 기술적인 설명 외에도 본 건은 트레이더가 화면을 통해 차입공매도 거래라고 믿고 제출한 거래가 CB통제의 오류로 인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 실수에 불과함.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

므로 본 건 거래에 관련한 모두가 한국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 미흡한 통제구조의 일부였던 보고서들을 검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및 주식 수량 재고를 담당하는 어느 누구도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음. 담당자들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업무를 도입할 때 수동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스템의 복잡성과 인적요소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리기 쉬운 결론이라고 생각함. 본 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거래 전후의 의도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즉, 단순 과실에 해당하여 사정에 맞는 벌금형에 처할 수는 있으나 형사고발에는 해당되지 않음. 금감원의 사전조치와 관련하여 저희의 부족한 점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률대리인이 방금 PT를 통해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견과 조사팀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바, 과징금의 액수가 감액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함. 또한, 형사고발에 대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법률대리인의 의견과 일치함. 본 건 공매도를 개인 또는 기관 차원에서 실행할 동기나 의도는 없었으며 그 이유는 당사가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 및 요약본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장 불법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본 건에서 형사고발은 부적절하고 과도하며 당사의 평판에 해가 될 것임. 또한, 지난 5년간 한국 주식 거래를 하면서 당사는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은 점을 위원님들께 강조드리고자 함. 당사는 귀 위원회가 당사의 기재출된 의견서 및 자료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감경사유를 고려하시어 고의가 아닌 영업활동 중

에 의도치 않게 일어난 무차입공매도 사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처리에 대해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제재를 고려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저희의 설명을 고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조금 전에 Mr. ∫ ∫ ∫ 께서 자조심 이틀 만에 증선위 개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조심과 증선위는 법원으로 말하면 1심과 2심과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님. 자조심은 증선위의 자문기구임. 그리고 자조심의 결정이라는 것은 증선위를 자문하고 보조하는 기능임. 그래서 자조심의 결정 내용 부분에는 전부 다 증선위에 그 내용들이 오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숙지하고 증선위에 참석하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통제장치가 무차입공매도 예방보다는 결제불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보고자료의 7페이지를 보면 내부통제 체계상으로는 해당 건들이 무차입공매도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확인되지 않아서 탐지가 곤란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말들을 종합해보면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장기간 방치해놓은 것이 아닌가, 즉, 무차입공매도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듭. 또 내부통제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기간 치유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의견은 어떠한지?

- ▶ (진술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PT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서는 이 내부통제체제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기인하고 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1 Cover Report든지, 관련 통제체계들이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가 있음. 사전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LAB Desk에서 각 AU간 차입이 일어나는 것을 기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기장을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고, 사실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면 좋은데 그 당시 도입 초기이다 보니 자동화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임. 그다음 사후적으로도 이 탐지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입공매도를 탐지하기보다는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이런 전체적인 것이 자동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내부통제였다고 신뢰를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핏 보면 마치 이런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내부통제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 즉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문제를 적발했고, 그다음에 2022년 5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 탐지장치까지 도입을 해서 제도개선을 크게 이루었음. 그

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만약 □□□□에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거나 해서 어떤 문제를 방치하거나 용인을 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입공매도 자체가 고객과의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한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동기나 유인도 없다, 이런 불법을 용인하고 방치하고 소홀히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T+1 관련 보고서에 음수가 나타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가 물론 유일한 원인은 아님.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무차입공매도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감.

- ▶ (진술인) 저희 T+1 Cover Report 자체의 목적이 결제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작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무차입공매도와는 관련이 없었던 사유가 대부분이었고 아까도 예시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오전에 차입 주문을 내고 장이 종료한 이후에 OTC 거래로 인해서 주식 상환 등을 통해서 수량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T+1 Cover Report를 보면서 결제불이행을 막는 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SLAB Desk에서 그 보고서가 음수인 것을 보고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음.

- ▶ (진술인)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음. 현재 이 위반사실이 자진신고에 의해서 밝혀지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위반사실이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결과 100건이 넘는 결과가 확인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 번 위반이 반복됐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이것이 전체 거래에 0.3%에 불과했는데, 그 당시에 이 무차입공매도 위반으로 인해서 이런 음수(negative figure)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면 백 몇십 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샘플링(sampling)을 해서 거래가 실제로 무차입공매도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check)했을 때 한 번도 무차입공매도로 나타난 적이 없었고, 거래소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intensive) 이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위반사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일련의 동일한 원인이나 이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그때 확인하고 바로 자진신고를 했을 것임.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SLAB Desk와 각 Trading unit 간에 분리기능으로 인해서 이 무차입공매도 자체는 그 시스템 하에서 충분히 잔고(inventory) 하에서만 주문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위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T+1 Cover Report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음. 전수조사를 위반 이후에 한 끝에 확인된 사항은 불행하게도

백 몇십 건의 위반사항이 발생을 했지만 그 시점에는 모든 가용자원을 다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은 위반 사실을 곧바로 발견해 낼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 그러니까 T+1에 음수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차입공매도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T+1에 음수(negative)가 나오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지만 무차입공매도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지?

▶ (진술인) 그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마지막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먼저, 회사에 소명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건 사전통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이하에서는 회사는 ■■■■■로 칭하고 본 건 공매도 주문 위탁자는 □□□□로 칭하도록 하겠음. 금감원은 2023년 11월3일자 사전통지서를 통해 ■■■■■가 해외투자자인 □□□□의 공매도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서 당해 매도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와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약 8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였음. 그런데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 따라 예고된 제재조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첫째, 위법한 무차입공매도 관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에 자본시장법이 공매도 수탁자에게 요구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가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실제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과거 다른 수탁자들에 대한 제재선례들과 비교할 때 ○○○○○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여부, 넷째, ○○○○○에 다른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 이하에서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이 사건 주요쟁점들에 대한 상세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 본 건 공매도 주문 위탁과 수탁거래 구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매도 주문 거래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인 ○○○○○가 국내 법인인 ○○○○○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위탁함으로써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진행된 거래종목 및 시기 등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해외에 있는 ○○○○○에 의해 내려지고 진행되었음. ○○○○○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주문수탁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수수료를 수취하였을 뿐이고 계열회사이기는 하나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법인인 ○○○○○와 주식 거래 전략 및 관련 세부내용에 관해 전혀 합의한 바가 없고 협의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음. 주요쟁점 중 첫 번째로 공매도 주문 수탁자인 ○○○○○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책임을 묻는 것에 필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음. 우리 자본

시장법에 과징금 부과근거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위법한 무차입공매도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공매도 주문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제재요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 수탁자의 경우에도 위탁자와 마찬가지로 무차입공매도라는 범위반행위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수탁자에게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라도 인정된다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그런데 무차입공매도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폐지되고 새롭게 과징금 부과규정이 도입된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공매도 주문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건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 즉, 현행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이유로 공매도 주문 수탁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의 경우와는 달리 ‘통상의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본 건의 경우 금감원에서 []가 법령위반에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필요요건으로 우리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의 과실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은 명백함. 우리 대법원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결과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음. 즉, 중대한 과실의 존재가 소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령에 위반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의제하는 것은 자기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임.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핵심은 [공매도]가 그 업무과정에서 만연히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아무런 주의를 하지 않고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결과발생을 용인함으로써 법령에 반하는 무차입공매도라는 위법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라 할 것임. 우리 자본시장법령은 공매도 주문 수탁자인 국내 증권회사들에 대해 두 가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첫 번째 의무는 매도주문이 공매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임. 두 번째 의무는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임.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확인의무는 위탁자로부터 문서, 전화, 전자우편,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 여부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받는 것에 한정됨. 이와 별도로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진정성을 수탁자가 별도로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시장에 확립된 견해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금감원은 2018년 11월경에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금감원은 그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하반기 이후에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의 확인의무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즉, 금감원은 2018년 하반기 당시 공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공매도 관련 사항에 대해 단순히 통보받을 것을 확인의무의 내용으로 한정하는 기존의 법해석 및 적용

이 불법 공매도 예방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예방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공매도 주문 관련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탁자의 확인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금감원의 공매도 주문 수탁자 의무에 관한 이와 같은 입장 표명 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매도 주문 수탁자의 법령상 확인의무를 위탁자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떠한 법령개정도 진행된 바 없음. 즉, 현행 자본시장법령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르면 공매도 주문 수탁자가 부담하는 확인의무는 여전히 공매도 주문 위탁자로부터 문서, 전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법령이 요구하는 공매도 관련 사항에 대해 단순히 통보받음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라고 하겠음.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주식회사]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공매도 주문 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것임. 구체적으로 [주식회사]는 공매도 주문 위탁자인 [주식회사]로부터 문서, 전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차입공매도 여부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사항을 통보받는 것에 필요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음. 한편 본 건 사전통지 대상 거래들과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도 금감원과 별도로 [주식회사]가 공매도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진행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한국거래소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이에 진행된 공매도 주문에 관해 [주식회사]가 수탁자로서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관련자료 검토 등을 포함한 상세하고 면밀한 회원감

리를 실시한 바 있음. 당해 감리는 2022년 8월5일부터 2022년 12월22일까지 진행되었음. 이와 같은 4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감리결과 한국거래소는 []가 현행 법령상 공매도 주문 수탁자에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였음. 본 건에서도 []가 공매도 주문 수탁자로서 법령상 규정된 의무를 전부 이행했는지 여부에 관해 한국거래소의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겠음. 그런데 금감원은 []가 본 건 사전통지대상거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로부터 독립거래단위 운영과 관련한 순보유잔고보고서를 수령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 그 보고서 내용의 검토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 위법한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규정은 명확하게 순보유잔고보고서(AU Report)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위탁자이고 위탁자는 국내 소재 계열 금융투자업자에게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국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수탁자인 []의 경우 위탁자인 []가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 순보유잔고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령하여 관리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현행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일 것임. 관련하여 []가 부담하는 독립거래단위 운영과 관련한 순보유잔고보고서 관리의 의무가 그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법령을 살펴보면 []

■■■■가 순보유잔고보고서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다만, 국내 증권회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가 아니라 금융투자협회가 그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모범규준에서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시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이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음. 모범규준 제15조는 ■■■■와 같은 금융투자회사에게 차입공매도 주문이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수탁한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해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공매도 주문 거래가 진행된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 기준 등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기적 혹은 수시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실제로 ■■■■는 이와 같은 금융투자협회의 권고를 감안하여 임의로 월별 매도주문을 1건씩 선정하여 당일 공매도 주문 수탁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해 왔음. ■■■■는 본 건 사전통지 대상이 된 공매도 거래 기간에도 이와 같은 확인작업을 진행했는데 모범규준에 따른 샘플검사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자체 확인결과 □□□□ 공매도 주문이 위법하다거나 달리 법령상 문제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 금감원은 또한 ■■■■가 T+1에 실시한 Pre-Matching 관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에 업무 수행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위탁자의 매도주문에 대해 결제불이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개시 전일인 T+1에 Pre-Matching 작업을 실시하면서 □□□□의 수탁자산관리자인 ■■■■으로부터

□□□□ 명의의 매도주문결제를 위해 필요한 잔고가 있는지 확인한 바 있음. 그런데 그러한 확인결과 □□□□가 위탁한 매도주문 상당수의 경우 T+1에 □□□□가 보유하고 있는 대상 주식의 잔고가 T+2에 진행된 결제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발견하고 ■■■■로부터 “unmatched”이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음. 금감원은 □□□□가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이상 □□□□로서는 □□□□의 위법한 공매도 주문을 의심하였거나 의심할 수 있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기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음. T+1의 수탁자산관리자가 T+2의 매도결제에 필요한 주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관련매도거래가 위법한 무차입공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T일 오후 12시에 해외투자자가 1만주의 주식을 매입하고 약 2시간 후인 오후 2시경에 당일 매입한 주식 1만주 중 5천주를 매도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매도인이 T일에 매입한 1만주의 주식은 T+2에 입고될 것이기에 T+1에 해외투자자인 매도인의 수탁자산관리자를 통해 5천주 매도주문에 관한 결제를 위한 잔고를 확인하면 수탁자산관리자로서는 주식잔고가 부족하다는 통보를 할 것임. 그러나 이 경우 매도인이 T일 오후 2시에 매도한 5천주의 주식은 위법한 무차입공매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함. 또한, 위탁자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4천주를 타사에 잠깐 대여했다가 그중 3천주를 매도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주식 매도

즉시 대여한 주식의 차주에게 대여주식 상환을 요청한 경우 상환요청한 주식의 T+1에 상환되지 않고 T+2에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당일 매도는 위법한 무차입공매도가 되지 않는 것임. 중요한 것은 거래결제일인 T+2에 정상결제 가능 여부인데 본 건 사전통지 대상이 된 모든 공매도거래는 T+2에 정상결제가 이루어진 거래들이었음. 이러한 이유로 수탁자인 [주식회사]로서는 [주식회사]가 위탁한 공매도가 위법한 무차입공매도라는 사실을 의심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었음. 한편 11월27일에 진행된 자조심 진행과정에서 자조심 위원님께서 [주식회사]의 경우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 진행 과정에서 음("-")의 수치로 표시된 T+ 관련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신 바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의견은 T+1에 당사에서 진행된 Pre-Matching 절차와 T+1 [주식회사]에서 내부적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준비하였던 Cover Report를 혼동하여 당사가 마치 Cover Report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오인하신 것에 따른 결과로 보임. [주식회사]는 본 건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공매도 주문 위탁자인 [주식회사]의 내부부서가 T+1이라는 문구를 넣은 내부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음("-")의 수치가 포함된 T+1 Cover Report로 불리는 내부보고서는 [주식회사]의 내부부서가 오로지 자신들의 내부목적으로 작성하고 [주식회사]에는 전혀 공유된 바 없는 문서임. T+1 Cover Report는 [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T+2 결제와 관련해 추가조치가 필요한 매도주식에 대해서는 음

(“-”)의 수치로 표시하여 적절한 추가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주식회사]가 진행한 T+1 Pre-Matching절차는 [주식회사]의 Cover Report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가 진행한 Pre-Matching절차를 통해 위탁자의 수탁관리자(Custodian)로부터 T+1의 특정거래 대상 주식의 잔고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unmatched” 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당사가 관련거래를 무차입공매도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 실제로 [주식회사]가 진행한 T+1 Pre-Matching절차는 특정 거래에 대해 수탁관리자(Custodian)가 보유한 주식의 충분한지 확인하여 T+2 거래결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사가 모든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일 뿐임. 수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보다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 당사가 자발적으로 추가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당사가 위탁자의 무차입공매도 주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법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것임. 다음으로 본 건에 관한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거 다른 수탁자들에 대한 제재선례들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과거 공매도 주문 수탁자인 국내증권사에 대해 제재가 내려진 사례의 경우에는 수탁자인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주문임을 알면서 수탁하였거나 차입공매도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수탁한 경우 등 수탁자인 증권사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재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이한 경우도 있었는데 2018년에는 T+2에 실제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무차입공매도 주문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글로벌 IB의 국내 지점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내려지지 않은 선례도 있었음. ■■■■■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공매도 주문 수탁회사들에 대한 제재선례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본 건 조사가 자진신고에 기해 시작되었고 ■■■■■는 자진신고 후에 지속적으로 금감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는 점, 본 건 사전통지대상이 된 모든 거래가 T+2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고 당 거래들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의 경우 임직원들에 대해 충실한 교육훈련을 이행해 왔다는 점, 본 건 조사 개시 이후 ■■■■■가 향후 공매도 주문 수탁과정에서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실행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 규모 및 관련 매출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사전통지된 제재금의 수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말까지 공매도 주문 수탁과 관련하여 ■■■■■는 □□□□로부터 총 약 2억 6,200만 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음. 그런데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있었던 본 건 공매도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될 예정으로 통보된 과징금은 약 83억 원으로 이는 제재대상기간의 3배가 넘는 기간 동안 당사가 공매도 거래로 수취한 총수수료의 31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T+1 Pre-matching 절차에서 ■■■■로부터 수량부족

을 이유로 결제승인 거절 통보를 여러 번 받으셨는지?

▶ (진술인) ‘unmatched’라는 통보가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맞음.

○ (위원) 그런데 수량부족의 원인 중 하나가 무차입공매도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 (진술인)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함.

○ (위원) 그런데 왜 그 무차입공매도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보셨는지?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것은 알겠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차입공매도일 수도 있는 것 아닌지?

▶ (진술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작위로 샘플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차입공매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진행한 결과, 저희가 임의로 시행한 샘플링 조사결과에서는 단 한 건도 □□□□가 주문한 공매도 거래가 무차입공매도라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마지막 진술인이 퇴장함.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의결안건 제230호 『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